

## 천안함 침몰원인 발표이후 북한의 예상태도와 우리의 대응방안

### 최진욱

(남북협력연구센터 소장)

5월 20일 민군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사건의 원인을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것이라고 발표한 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세부대책이 뒤따랐다. 정부는 북한의 행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선박의 제주해협운항 중단,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교역의 중단, 대북 심리전 재개, PSI 적극참여 등 대북 응징조치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천안함 침몰이후 우리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정부는 사건 직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 침몰의 원인을 예단하지 않는다는 원칙 위에 철저한 조사에 임하는 인내력을 보였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와 달리 북한의 대남 도발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보다는 국제적 기준에 맞는 조사를 통해 국제사회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한 후 대응책을 세우겠다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민·군 합동조사단이 구성되고 여기에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 등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였다. 외국 전문가들의 판단은 자국의 최고지도부에 보고되어 정책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참여는 조사결과의 전문성 뿐만 아니라 공신력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조사결과가 '날조극'이며 검열단을 보내겠다고 고집하면서 인간함을 다해 이번 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는 조사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나아가 북한은 남북관계 전면폐쇄, 남북불가침합의 전면파기, 전면전쟁, 전시상태 돌입 운운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대내용, 대외용, 대남용 등 다양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내 차원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대내 결속을 도모하는 효과를 보았다. 이는 화폐개혁 이후 동요하는 사회분위기에 긴장을 조성하고 후계체제를 정착시키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군부의 충성심을 유도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경제난과 사회불안 등이 호전될 가능성이 없고 후계체제 정착에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 북한은 긴장의 지속을 필요로 할 것이다.

대외 차원에서 북한은 천안함 사건에 대하여 끝까지 결백을 주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대북 비난과 제재에 중국이 동참하지 않는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 중국은 조사결과 발표이후 이를 수용하기 보다는 '평가작업'에 들어갔고 이번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확신이 없다면서 북한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대남측면에서 북한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모면하고 오히려 책임을 이명박 정부에 덮어 씌워 남남갈등을 조장하려 하고 있다. 향후 북한은 이명박 정부하에서 대북지원과 경협에 대한 기대를 버리고 이명박 정부를 궁지에 빠뜨리려 할 것이다. 추가적인 협박과 도발을 통해 남한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전쟁이나 평화냐’의 논란을 부추켜 이명박 정부를 압박하려 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의도를 간파하고 단호하고 원칙있는 대응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우선, 남한내 전쟁 공포감을 유발시키려는 북한의 대남 심리전에 대하여 우리의 의지가 단호하며 우리의 대북 강경정책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둘째, 김정일 정권과 주민을 분리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통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대내 결속을 도모하고자 하나, 실제로 북한주민들은 김정일 정권의 천안함 공격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남북경협의 중단에도 불구하고 영유아 지원은 지속하기로 한 것은 적절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은 남한과 국제사회의 대북지원과 경제협력에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 대북 심리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김정일 정권은 지난 2년 여간 핵실험, 장거리 로켓발사를 비롯한 각종 비방·협박을 계속하다가 마침내 천안함에 대한 기습 어뢰 공격으로 남북관계를 파탄내고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켰다.

셋째, 그 어느때 보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고 북한의 다음 수순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북한은 당분간 남북교역의 감소를 대중국 교역을 통해 보완하려할 것이며 북·중교역이 일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감소는 북한의 외화수입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장기적으로 북·중교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중국의 대북지원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 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를 허용하여야만 할 것이며 ‘주체’를 부르짖는 북한으로서 딜레마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은 북한이 대미 접근을 시도하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그 시점을 대비하여 확고한 한미공조를 통해 대북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당분간 남북관계의 긴장은 불가피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대못박기’는 피해야겠으나 대북 제재나 남북관계의 경색, 북·중관계의 밀착 등에 대하여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도 없다. 이번 천안함 사건을 단호한 자세와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과거의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남북관계를 만드는 계기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